

육아정책 소식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4월 1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8개 주요 카드사(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를 통해 지급되며, 보호자는 이를 지급받는 대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돌봄포인트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잔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 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00억 원(전체예산의 약 88%, 전자상품권 지역 기준 93.4%)이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조기 집행되어,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

어린이집의 휴원이 길어지고 긴급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내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월 20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각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내 대응 지침을 안내해왔고 긴급보육 증가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 * 긴급보육 이용률 10.0%(2.27.) → 17.5%(3.9.) → 28.4%(3.23.) → 31.5%(3.30.) → **51.8%(4.20.)**
- ** (코로나19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기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외부인 출입금지, △아동 및 보육교직원 2회 이상 발열체크, △수시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
- *** (강화된 방역조치)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 등원시 독립반 편성 운영 △접촉 최소화를 위해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

본 점검은 그간의 대응지침 및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관내 어린이집 중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며, 현장 방문시 점검자들은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육실을 출입하는 대신 관찰과 원장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결근 시에도 보육료·인건비 및 수당이 정상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휴원 장기화에 따라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의 운영난 완화를 위해 기관보육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5월 29일(금),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간,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로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신속히 대응해왔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치 세부 내용 〉

밀집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밀집도 2/3이하 권장, 지역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밀집도 2/3 이하 강력 권고 → (강화) 수도권 고 2/3, 유·초·중·특수학교 1/3 이하 등교 원칙 ※ 고3은 원칙적으로 등교, 고1·고2 교차 등교 등 ※ 비수도권은 기존 기준 적용 • 기존 등교개시일 원칙대로 실시, 학년별·학급별로 고르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되, 등교 학년·학급은 시도·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
지역감염 선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 신속한 등교수업일 조정 등 예방적 선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학교 : 시도교육청,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 →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전환) ▶ 지역(시·군·구) : 교육부, 시도교육청-학교, 방역당국과 협의 → 등교수업일 조정(원격 전환) • 사례) 경기 부천, 인천 계양·부평
학원, PC방 및 고위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 시행 •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원 이용자제 당부, 합동 방역 점검 실시

교육부, 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6월 11일(목)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연계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2020.1.29. 공포, 2020.3.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은 6월 29일(월)부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연계한다. 그동안 학부모는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유치원은 이를 보관·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의 건강검진 시기, 검진일자, 키·몸무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할 수 있어 기존 건강검진 결과서 보관·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99% 안심등하원 자동알리미 설치, 약 3만 명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0일(수)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3만5671개소)의 98.9%인 3만5287개소에 안심등하원 알리미(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전체 등원 아동의 99.7%인 90만 2339명이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안심등하원 알리미는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가 아동이 소지한 꼬리표(태그)를 읽어 아동의 등원과 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예산 9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하였다.

지난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7시 30분)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보육 기간이었던 5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41.9%(49만 8958명)가 1회 이상 연장보육을 이용하여 장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어 상시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18.2%(21만 6629명)로 오후 5시 이후 월 평균 이용시간은 15.5시간이었다. 전국 어린이집 중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68.5%로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78.2%, 직장 70.9%, 민간 66.4%,

가정 68.2%로 나타났다. 오후 4시 이후에 남아있는 아동을 위한 연장보육반은 어린이 집당 평균 1.2개, 전국 총 4만2956개(전체 18만 개 반의 23.8%)가 구성되었고, 이 중 67.9%인 2만9187개 연장반에 전담교사가 배치되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은 낮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현황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현황은 “아이사랑포털 (<http://info.childcare.go.kr>)-통합정보공시-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 이후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을 전담 보육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여 채용된 보육교사로 오후 3시~7시 30분 근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이돌봄비 자격정지 기간 확대, 자격취소 사유 추가,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작년 3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내용 〉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여 아동 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자격취소 사유에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함.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 전담 관리 기관으로서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여 정책 연구, 표준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등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함. - 이밖에도 아이돌보미 채용,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노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근거가 신설됨.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에서의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 등 그간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을 반영하고자 함.
서비스 질 및 이용자 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기 전 인성 및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이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는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함.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피드백 강화를 위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해당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도 알 수 있도록 함.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부모가족의 날’(5.10)을 맞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돌아보고, 한부모가족이 법·제도의 사각지대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한부모 가구(154만 가구)는 일반 가구(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389만 원)의 56.5%(220만 원), 자산은 전체가구(34,042만 원)의 25.1%(8,559만 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상담, 제재 조치, 면접 교섭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18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열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해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양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일상 속에서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